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5
----------	------

발의연월일 : 2024. 7. 8.

발 의 자 : 김윤덕 · 이해식 · 윤준병
신영대 · 이연희 · 한병도
위성곤 · 박상혁 · 임오경
조인철 · 송옥주 · 정진욱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6년 4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한 것으로 당시의 영상산업의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의 수요 감소 등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체제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 나.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다.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등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 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 바.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
- 사.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영화
필름 등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8조 및 제49조).

아.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
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0
조부터 제65조까지).

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
지정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차.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승계 및 영화시청제공업의 준수사
항 등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부터 제85
조까지).

카.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
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타.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91조부터
제106조까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게임물

-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38조에 따른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영화 제작·복제를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배급업자: 영화를 수입하거나 배급·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상영업자: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한관람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영화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영화감상실업: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관객이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영화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영화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마. 그 밖의 영화시청제공업: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영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13.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4. “내용정보”란 영화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15.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17.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 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48조에 따른 한국영상 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7.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8.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9.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 적인 운용방안
10.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11. 영상기술 개발·표준,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2.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
13. 지역 영상문화 진흥
14.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의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1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7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7조제1항의 표준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32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

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13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제14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정관)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등기)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5명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1조(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3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5. 제32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8. 영화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9.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10.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1.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3. 제38조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4. 제5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5. 제57조에 따른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6. 지역 영상문화 진흥
 17.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18.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 제24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회의공개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

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소위원회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편성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감사)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사무국)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30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35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6.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7.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8.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9.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10.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11.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12.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13.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14.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15.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6.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8. 그 밖에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 제1항제18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연도에 제5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 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5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

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37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①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절차·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①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권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1조(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절 등급분류 및 영화의 상영 등

제44조(등급분류) ①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를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상영 또는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제9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4.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
6. 그 밖에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본문에 의한 영화의 등급은 그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 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술·담배에 관한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술·담배에 관한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청소년 관람불

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 및 시청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 및 시청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시청제공, 유통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유통하거나 시청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 또는 시청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 시키거나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거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이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분류 받은 등급을 변조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유통하거나 시청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영화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⑩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

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영화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영화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영화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등급의 재분류) ① 제44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분류 받은 등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① 영화에 관한 광고

(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4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제한관람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한관람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

물이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영화와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②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49조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와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와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와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 영화제작업자는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영화 또는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50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재해예방조치)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독립영화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5조(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제58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1.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 제5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제60조(제한관람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상영관에서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3. 제4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5. 제51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6.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57조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7. 제59조에 따른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8.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9.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63조(영업 등의 승계)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62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제64조(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65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관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영화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영화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영화를 공급하는 자가 그 영화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67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를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
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7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7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7항에 따른 영화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영화에 대하여 제86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

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69조(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는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제7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영화가 제4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2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화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영화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68조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68조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 체계 구축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68조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68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71조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3조(복제 등의 확인) ①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영화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영화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신청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44조제9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른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5조(불법영화의 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제작·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4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
2.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영화
3. 제71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영화

4.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영화

②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4조제9항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8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제한관람가 영화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영화를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영화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에서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영화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107조에 의한 영화단체(이하 “영화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제4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8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44조, 제45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79조(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영화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영화를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영업의 제한) 제79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제81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79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2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7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

· 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영화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영화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영화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화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4. 영화감상실업,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제84조(영업의 승계) ① 제37조 또는 제79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화업자 또는 영화시청제공업자(이하 “영화업자등”이라 한다)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
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업자등의
영화에 관한 영업시설·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업자등의 지
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
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
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에 관한
영업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85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영화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영화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5조(영화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7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86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영화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44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87조(행정처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4. 제8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8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83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

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영화의 제작 및 유통

2. 영화의 유해환경 개선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업자등에 대하여 제8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제84조제5항에 따라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8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화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90조(폐쇄 및 수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또는 제7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을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당 영화를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화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영화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가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9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9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68조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제9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6.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영화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8. 영화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93조(구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등급분류신청, 제66조제3항에 따른 영화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위원장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6조(위원의 임기)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9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9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2조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8조(회의공개)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9조(소위원회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9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0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92조제2호에 따른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04조(사무국)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0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개정·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44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6조(국고지원)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7조(영화단체의 설립) ① 영화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화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영화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영화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영화단체는 영화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영화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영화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화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9조(모범적인 영화업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화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영화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4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46조에 따른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66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제73조에 따른 영화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79조제1항에 따른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8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자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1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의한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1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1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113조(벌칙) 제9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한 자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한 자
3.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4.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6.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를 유통한 자
7. 제83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화감상실,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6항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유통하거나 시청제공을 한 자
2. 제47조를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3.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에서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한 자
4. 제62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영화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영화를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7.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에서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9.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10. 제83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87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자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자

2. 제9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1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키거나 시청하게 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화를 시청에 제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5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7. 제5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8. 제61조를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한 자

3. 제6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20조(과태료의 부과)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영화수입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수입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배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영화시청제공업, 영화감상실업, 영화소극장업, 제한관람가영화소극장업 및 그 밖의 영화시청제공업으로 본다.

제4조(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영화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영화발전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

제7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설립된 비디오물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단체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를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7조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의3제1항제2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
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